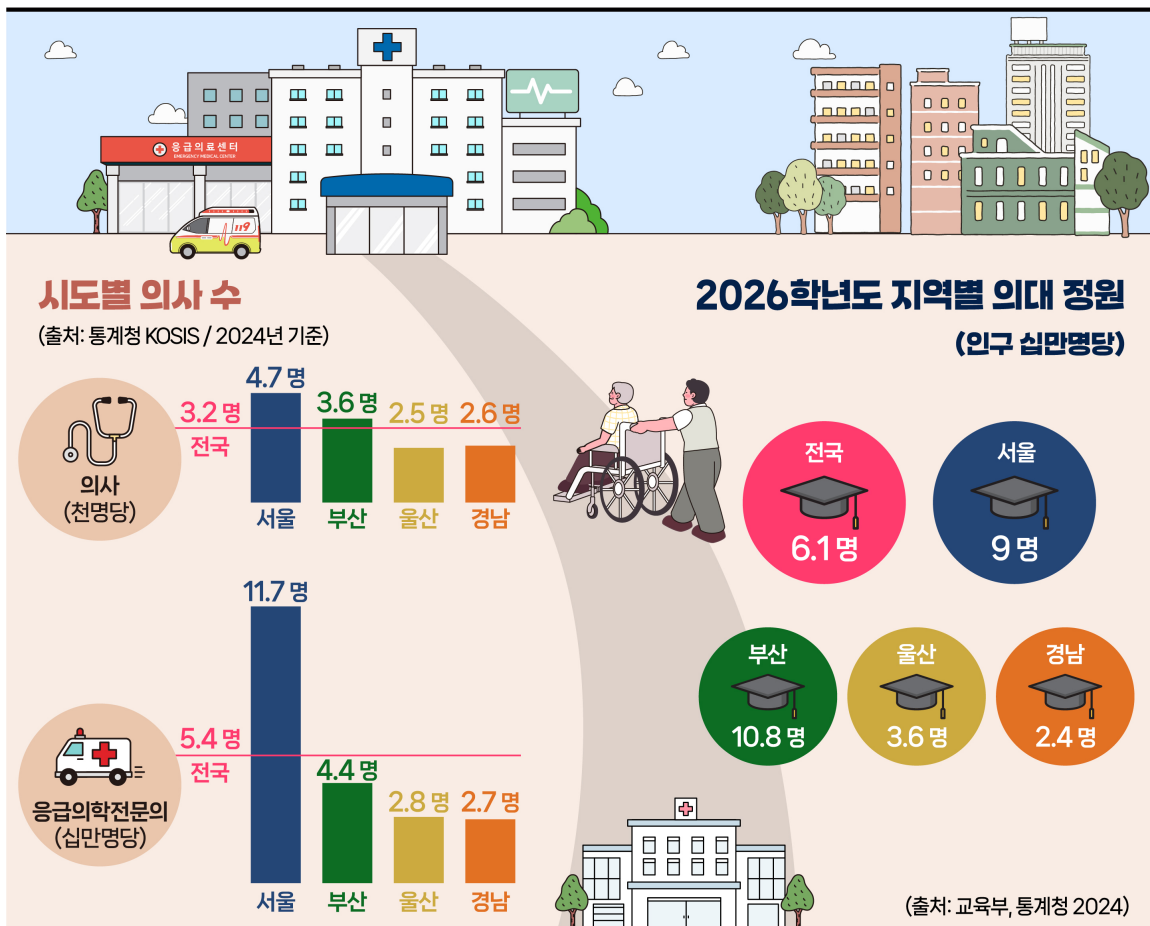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2025. 12. Vol. 40

본 뉴스레터는 부산·울산·경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의정 현안이슈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메일링서비스입니다.

진료받으러 서울 가는 중



“아프면 서울 가야 한다” 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통계는 여전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4.7명으로 전국 평균(3.2명)을 훨씬 웃돕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수도 지방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서울 원정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교통·숙박비, 기회비용 등을 모두 합한 연간 총비용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2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은 지역 의대 정원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은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가 높지만, 지역 내 의사 수는 그에 비해 낮다는 점은 지역 의료 인력의 정착 유인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제도뿐 아니라,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의료법
-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농어촌의료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의료원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자치법규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거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
-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 더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추천 정책자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김윤 의원실 / 2025



**경기 동부권 의료취약지
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2025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2025
- **지역 간 의료 격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2023
-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지방의정 말!말!말!]

□ **김재운** 부산광역시의회의원(국민의힘 | 부산진구3 | 건설교통위원회)

“지역 의료 공공의료 체계의 주체는 지방 정부입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중략)지역의 의료가 무너져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방치한 의료 불평등의 증거라고 봅니다. 중증환자에게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가 빈번한 현실인데 이는 환자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의료 인프라와 신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지방의료 붕괴와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 등급을 자랑하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조차 중대한 위급상황에서 제 역할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지역의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중증질환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09.02.)

□ **손근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북구1 | 산업건설위원회)

“울산이 공공의료에는 열악 지역인데요, 사실 의료성을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울산에 병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다수도권에 가야죠. 경제성은 지방들은 사실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공공의료원 같은 것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의료 균형 발전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원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중략)어떤 특수한 상황이 오면 정말 우리 울산의 의료 현실이 대응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공공의료원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정말 좀 느꼈거든요.(중략)시장님이 이런 의료원 유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있어야서는 충분히 정부를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울산광역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3.)

□ **신종철** 경상남도의회의원(국민의힘 | 산청군 | 문화복지위원회)

“경남의 미충족 의료는 2023년 기준 9.3%로 전국 5.3%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도민이 필요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의 시급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중략)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 체계 확립,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 서부의료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 체계 재정비 등이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서부의료원 건립과 같은 중장기 정책뿐 아니라, 공중보건 의사 공백 대응, 전문의 유치 지원, 공공의료 기능 확대 등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남이 필수의료 강화의 모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신속한 실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5.11.28.)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국회부산도서관, 특별 기획 북큐레이션 「그날 12·3」 개최



국회부산도서관(관장 정미영)은 12월 3일(수) 특별 기획 북큐레이션 「그날 12·3」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큐레이션은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비상 상황의 법과 정치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주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함께 전시하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의미를 성찰하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 051-608-8074

● 국회부산도서관, BNK부산은행과 함께 금융교육 진행(12.11.)

국회부산도서관은 12월 11일(목), BNK부산은행과 협력하여 임주는 금융교육 강사를 초청해 「자녀와 함께 배우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축의 필요성, 투자 개념, 예금자보호제도 등 기초 금융지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식 모의투자과 금융 골든벨 활동을 통해 금융을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역량을 키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 관련 문의: 051-608-8102

● 「Merry Jazzy Christmas in 국회부산도서관」 재즈 콘서트 행사 개최



국회부산도서관은 12월 13일(토) 15시,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Merry Jazzy Christmas in 국회부산도서관」 재즈 콘서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트럼펫 연주자 박종상 콰르텟과 재즈 보컬리스트 김민희의 협연으로 진행되어, 감미로운 재즈 명곡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세련된 사운드로 재해석해 깊이 있는 트럼펫의 울림과 감각적인 스윙 보컬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음악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 관련 문의: 051-608-8022



이번 지방의정 뉴스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지방의정 뉴스레터는 구독자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CLICK



국회부산도서관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051-608-8150



국회부산도서관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정보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정보 북큐레이션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지난호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Tel. 051-608-8072 | nabl_newsletter@nanet.go.kr